

이용섭의원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MB정부 4년, 무너진 지방경제를 말한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
(광주 광산구을)

발 간 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9%가 집중되어 있고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무력화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각종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의 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소득현황, 각 지역별 조세지원현황과 부도율, 가계부채 등 중산서민들과 지방 중소기업의 실제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각 지역별 경제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MB식의 수도권위주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과밀로 인해 혼잡한 수도권은 비워서 경쟁력을 높이고 황량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간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권의 인구, 소득,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정부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섭

<목 차>

1. 개요	1
2.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2
3. 광주시 고용사정 악화	4
4. 호남권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 평균소득 전국 최하위	7
5. MB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 호남권 전국최고수준	17
6. 어음부도율, 호남권 최고수준	21
7. 기업 R&D 지원 호남 최하위, 수도권 집중	23
8. 조달청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지역편중 지원	29
9.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지역별 편차 극심	32

1. 개요

- 지방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고용, 소득, 가계부채, 기업 어음부도율을 권역별 혹은 16개 시도별로 분석하였음.
 - 분석을 위해 통계청, 한국은행, 국세청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수년간의 변화, 현재 권역별 상태를 비교분석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인 국세청, 조달청,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음.
 - 국세청의 '기업R&D 세제', 조달청의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기업육성 사업'을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하여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각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함.

- 이들 자료를 토대로 지방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정부정책이 수도권 중심에서 균형발전으로 기조가 전환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함.

2.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49년 2,017만명에서 '10년 4,858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는 417만에서 2,117만으로 5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 인구대비 비중도 20.7%에서 43.6%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 반면 호남권은 '49년 509만명에서 '10년 499만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국 인구대비 비중도 25.2%에서 10.3%로 절반가까이 감소하였다.
- 영남권은 '10년에 1,270만명으로 '49년 634만명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인구비중은 31.4%에서 26.2%로 5%p가까이 감소하였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영남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호남권 인구만 줄어들고 있어 호남권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음.
-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영남권과 호남권 모두 인구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권역별 인구수 및 비중

단위 : 천인, %

	전국	호남		영남		수도권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1949년	20,167	5,090	25.2%	6,339	31.4%	4,172	20.7%
1955년	21,502	5,251	24.4%	7,126	33.1%	3,928	18.3%
1960년	24,989	5,948	23.8%	8,030	32.1%	5,194	20.8%
1966년	29,160	6,570	22.5%	9,074	31.1%	6,896	23.6%
1970년	31,435	6,438	20.5%	9,551	30.4%	8,879	28.2%
1975년	34,679	6,438	18.6%	10,585	30.5%	10,914	31.5%
1980년	37,407	6,065	16.2%	11,429	30.6%	13,281	35.5%
1985년	40,420	5,949	14.7%	12,065	29.8%	14,418	35.7%
1990년	43,390	5,715	13.2%	12,555	28.9%	16,758	38.6%
1995년	44,554	5,224	11.7%	12,769	28.7%	17,855	40.1%
2000년	45,985	5,232	11.4%	12,829	27.9%	18,792	40.9%
2005년	47,041	5,008	10.6%	12,649	26.9%	20,104	42.7%
2010년	48,580	4,994	10.3%	12,704	26.2%	21,174	43.6%

3. 광주시 고용사정 악화

- 민주정책연구원 자료(「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11.10)」)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용사정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아도 16개 시도 중에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들어났음.

(1) 고용의 양적 측면

- 정부가 발표하는 취업자와 실업자 통계에서는 누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업자나 잠재 실업자를 포함해 보면, ‘10.9월 기준 광주시의 실제고용률은 54.4%, 실제실업률은 14.3%로 16개 시도 중 15위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10.9 실제고용률(하위 5위) : 부산 52.0%, 광주 54.4%, 대구 54.8%, 대전 54.9%, 전북 56.0%, 전국평균 57.0%
- ‘10.9 실제실업률(하위 5위) : 부산 14.9%, 광주 14.3%, 서울 13.4%, 대구 13.2%, 울산 12.6%, 전국평균 12.0%

- 각 시도별로 고용의 양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실제 실업률 등을 종합점으로 합산한 결과 광주시는 0.22(전국 14위)로 전국평균 0.38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0.9 고용의 양 종합점수지표(하위 5위) : 부산 -0.04, 대구 0.20, 광주 0.22, 대전 0.24, 전북 0.29, 전국평균 0.38

(2) 고용의 질적 측면

- 10.9월에 광주시의 단기근속자 비율은 35.6%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0.9 단기근속자 비율(하위 5위) : 광주 35.6%, 대전 35.2%, 인천 34.4%, 제주 33.7%, 전국평균 27.2%
- 월평균임금도 광주시는 184만원으로 전국평균 203만원에 못 미치고 있음.
- '10.9 월평균임금 비율(하위 5위) : 대구 172만원, 제주 177만원, 강원 178만원, 인천 183만원, 광주 184만원
- 고용안정(근속년수), 비정규직, 임금수준, 임금평등,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고용의 질 종합점수지표 또한 광주시는 0.48로 16개 시도 중 10위로 하위권 수준임.
- '10.9 고용의 질 종합점수지표(하위 5위) : 인천 0.36, 대구 0.41, 제주·대전 0.44, 충남 0.46, 광주·경북 0.48, 전국평균 0.49

〈'10.9월기준 16개 시도별 고용의 양적·질적지표〉

()안은 16개 시도별순위

	양적지표			질적지표		
	실제고용률 (%)	실제실업률 (%)	고용의양 종합점수지표	단기근속비율 (%)	월평균임금 (만원)	고용의질 종합점수지표
전국	57.0	12.0	0.38	31.7	203	0.49
광주	54.4 (15)	14.3 (15)	0.22 (14)	35.6 (16)	184 (12)	0.48 (10)
서울	56.7 (9)	13.4 (14)	0.38 (9)	31.8 (7)	221 (2)	0.52 (6)
부산	52.0 (16)	14.9 (16)	-0.04 (16)	29.3 (3)	187 (10)	0.51 (8)
대구	54.8 (14)	13.2 (13)	0.20 (15)	33.2 (12)	172 (16)	0.41 (15)
인천	57.4 (7)	12.5 (11)	0.40 (7)	34.4 (14)	183 (13)	0.36 (16)

	양적지표			질적지표		
	실제고용률 (%)	실제실업률 (%)	고용의양 종합점수지표	단기근속비율 (%)	월평균임금 (만원)	고용의질 종합점수지표
대전	54.9 (13)	12.1 (9)	0.24 (13)	35.2 (15)	199 (5)	0.44 (13)
울산	56.1 (11)	12.6 (12)	0.34 (10)	30.5 (5)	239 (1)	0.55 (3)
경기	57.4 (7)	12.2 (10)	0.42 (6)	32.2 (10)	214 (3)	0.49 (9)
강원	56.2 (10)	11.3 (8)	0.32 (11)	32.9 (11)	178 (14)	0.55 (3)
충북	59.1 (5)	10.0 (4)	0.52 (5)	32.0 (8)	193 (7)	0.55 (3)
충남	60.1 (4)	9.1 (3)	0.61 (3)	32.1 (9)	189 (8)	0.46 (12)
전북	56.0 (12)	10.7 (5)	0.29 (12)	31.5 (6)	186 (11)	0.52 (6)
전남	60.3 (3)	7.7 (1)	0.58 (4)	27.5 (2)	204 (4)	0.56 (2)
경북	62.3 (1)	8.6 (2)	0.74 (2)	29.6 (4)	188 (9)	0.48 (10)
경남	57.8 (6)	10.9 (6)	0.39 (8)	27.2 (1)	194 (6)	0.57 (1)
제주	61.0 (2)	11.3 (8)	0.77 (1)	33.7 (13)	177 (15)	0.44 (13)

출처: 민주정책연구원 ('11.9),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4. 호남권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 평균소득 전국 최하위

(1) 호남지역 소재 법인의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서울 1/5 수준)

- 호남지역 소재 법인들의 2010년 평균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
 - 광주 1.6억원, 전남 1.5억원, 전북·제주 1.3억원으로 16개 광역 자치단체 비교시 각각 13위, 14위, 15위
 - 강원(1.7억원), 대구(1.9억원), 충북(2억원)도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10년 법인의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2억원)이며 광주는 서울의 22.2%, 전남은 20.8%, 전북은 20.8%에 그침
 - 전국 평균은 4.6억원인데 평균을 넘어서는 지역은 서울(7.2억원), 대전(5억원), 경북(5.3억원), 울산(6.7억원) 4곳에 불과

<'09년~'10년 광역자치단체별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9년 신고			2010년 신고			전년대비 법인당 소득금액 증감(%)
	법인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 액	법인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 액	
합계	419,420	2,005,983	4.8	440,023	2,039,345	4.6	-4.2%
서울	146,640	1,053,330	7.2	150,378	1,084,281	7.2	0.0%
인천	16,860	63,402	3.8	17,842	64,864	3.6	-5.3%
경기	86,206	318,295	3.7	91,298	373,435	4.1	10.8%
강원	9,151	15,441	1.7	9,618	16,729	1.7	0.0%
대전	9,406	45,819	4.9	10,055	50,632	5	2.0%
충북	11,470	23,676	2.1	12,326	25,003	2	-4.8%

구분	2009년 신고			2010년 신고			전년대비 법인당 소득금액 증감(%)
	법인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 액	법인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 액	
충남	14,995	38,159	2.5	15,849	53,442	3.4	36.0%
광주	10,543	18,144	1.7	11,365	17,674	1.6	-5.9%
전북	12,414	15,941	1.3	13,609	17,175	1.3	0.0%
전남	15,341	33,290	2.2	17,139	25,722	1.5	-31.8%
대구	13,570	27,247	2	14,057	27,270	1.9	-5.0%
경북	17,860	140,988	7.9	18,831	99,159	5.3	-32.9%
부산	23,560	72,191	3.1	24,646	66,148	2.7	-12.9%
울산	6,236	58,430	9.4	6,544	43,774	6.7	-28.7%
경남	20,982	76,881	3.7	21,978	68,087	3.1	-16.2%
제주	4,186	4,749	1.1	4,488	5,950	1.3	18.2%

[자료 : 국세청]

(2) 전남지역 법인, 전년 대비해 평균소득금액 31.8% 급감

□ 전남지역 법인, '09년도와 대비한 '10년도 법인당 소득금액은 -32% 하락해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소득금액 하락이 가장 컸으나 경북지역 소득금액(5.3억원)은 전국 평균(4.6억원)을 상회

○ 전남 : '09년 2.2억원 → '10년 1.5억원,

○ 전남지역은 09년 법인수 15,341개에서 10년 17,139개로 전년대비 11%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법인당 소득금액은 32% 하락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평균소득금액도 전년대비 -12.9%, -28.7%, -16.2%로 하락폭이 컸음

○ 충남지역은 전년대비 36%, 제주는 18.2%, 경기도는 10.8% 상승

(3) '10년도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 전년대비 0.6% 상승(전국 최저상승)

- '10년도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는 2,362만원으로 전년대비 0.6%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률 3.0%와 2.4%p 차이나며 전국 최저 상승율
 - 경기지역 평균급여 상승율이 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충청, 부산경남, 서울이 3%대 상승
- '10년도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는 전국평균의 90%수준이며 액수로는 249만원 적음
 - '08년도 165만원(93%), '09년도 187만원(93%)에 이어 계속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하면 '08년 372만원(86.3%) → '09년 395만원(85.6%) → '10년 464만원(83.6%)
 - 대구경북 지역은 '10년도 평균급여가 전국평균과 비교해 252만원, 서울과 비교해 467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컸음

<'08년~'10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급여>

(단위 : 천명, 만원)

귀속년도	구분	총인원	1인당 평균급여	전년대비 증감율	전국 평균과의 차이
2008	계	14,046	2,517		
	서울청	4,736	2,724		207
	중부청	3,781	2,414		-103
	대전청	1,237	2,406		-111
	광주청	1,023	2,352		-165
	대구청	1,131	2,332		-185
	부산청	2,139	2,481		-36

귀속년도	구 분	총인원	1인당 평균급여	전년대비 증감율	전국 평균과의 차이
2009	계	14,295	2,536	0.8%	
	서울청	4,838	2,744	0.7%	208
	중부청	3,866	2,422	0.3%	-114
	대전청	1,254	2,391	-0.6%	-145
	광주청	1,043	2,349	-0.1%	-187
	대구청	1,144	2,339	0.3%	-197
	부산청	2,150	2,519	1.5%	-17
2010	계	15,171	2,611	3.0%	
	서울청	5,118	2,826	3.0%	215
	중부청	4,138	2,544	5.0%	-67
	대전청	1,384	2,470	3.3%	-141
	광주청	1,095	2,362	0.6%	-249
	대구청	1,211	2,359	0.9%	-252
	부산청	2,225	2,590	2.8%	-2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의원실에서 재구성)

(4) '10년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100명중 43명은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이 1,770만원 미만

- 2010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등을 반영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1,770만원임
- '10년 호남지역의 과세미달 인원은 47만명이고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3%로 100명 중 43명은 과세표준인 1,770만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과세미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35.9%)이며 호남과는 7%p 격차

<2010년 지역별 과세미달비율 현황>

(천명, %)

구분	총인원	과세미달인원	과세미달비율
계	15,171	5,929	39.1
서울청	5,118	1,935	35.9
중부청	4,138	1,611	38.9
대전청	1,384	543	39.2
광주청	1,095	470	42.9
대구청	1,211	510	42.1
부산청	2,225	860	38.6

<자료 : 국세청, 2010년 귀속분은 작성일 현재 잠정 집계분>

(5) 소득세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하는 인원(11만 4천명), 서울이 절반이상(6만명),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천명(2.63%)에 불과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8,8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인원은 전국에 11만 4,000명
 -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6만명, 52.6%)이며 그 뒤는 경기지역(25.4%)으로 수도권에 전체 고소득자 78% 거주
 -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천명으로 전체의 2.6%, 충청과 대국경북이 각각 5천명으로 전체의 4.4%임
- 과표구간이 가장 낮은 단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전국 평균 구성비는 60.6%인데 호남지역은 이보다 5.3%p 높은 65.9%이며 가장 높은 단계인 8,800만원 초과구간의 전국 평균은 1.2%인데 호남은 0.5%로 0.7%p 차이

- 이는 호남지역이 소득이 낮은 구간의 인원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은 인원의 비율은 낮다는 것을 나타냄
- 중간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이하,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 역시 전국 평균 구성비(33.1%, 5.1%)에 비해 구성비가 각각 2.9%p, 1.7%p 적는데 이는 소득 중간층, 즉 중산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2010년 지역별 과표구간별 인원 현황>

(단위 : 천명, %)

과세표준 구간	서울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원	구성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계		9,242	100	3,183	2,527	841	625	701	1,365
12백만원이하	6%	5,597	60.6	1,805 (56.7%)	1,564 (61.9%)	527 (62.7%)	412 (65.9%)	457 (65.2%)	832 (61.0%)
46백만원 이하	15%	3,062	33.1	1,122 (35.2%)	808 (32.0%)	279 (33.2%)	189 (30.2%)	214 (30.5%)	450 (33.0%)
88백만원 이하	24%	469	5.1	196 (6.2%)	126 (5.0%)	30 (3.6%)	21 (3.4%)	25 (3.6%)	71 (5.2%)
88백만원 초과	35%	114	1.2	60 (1.9%)	29 (1.1%)	5 (0.6%)	3 (0.5%)	5 (0.7%)	12 (0.9%)

(6) 광주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 전국 평균의 80%, 서울의 57% 수준,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소득은 1,7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쳐

- 개인사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0년 신고분은 전년도 평균 2,400만원에서 비해 100만원 상승
- 광주지역은 개인사업자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00만원 상승한 2,000만원이며 전남은 1,700만원 전북은 1,900만원

- 전남 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700만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 2010년 신고분 광주지역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2,000만원)은 전국평균 2,500만원, 서울 평균 3,500만원에 비해 80%, 57% 수준
- 전남지역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 대비 68%, 48.6% 수준에 그침

<2010년 개인사업자 평균소득 금액>

(천명, 억원)

귀속연도 주소지	2009년 신고분			2010년 신고분		
	인 원	종합소득 금액	1인당 평균소득	인 원	종합소득 금액	1인당 평균소득
합 계	3,584	850,825	0.24	3,571	902,257	0.25
서울	972	323,126	0.33	945	332,813	0.35
인천	215	39,474	0.18	213	42,069	0.20
경기	862	184,574	0.21	879	200,116	0.23
강원	91	15,180	0.17	90	16,405	0.18
대전	100	19,815	0.20	100	21,433	0.21
충북	89	15,586	0.18	88	17,101	0.19
충남	115	20,752	0.18	116	22,711	0.20
광주	100	19,022	0.19	100	20,284	0.20
전북	96	16,492	0.17	98	18,456	0.19
전남	79	13,088	0.17	89	14,960	0.17
대구	168	38,187	0.23	167	40,607	0.24
경북	142	24,974	0.18	138	27,375	0.20
부산	267	60,776	0.23	261	63,930	0.24
울산	71	15,392	0.22	71	16,666	0.23
경남	182	37,729	0.21	181	40,181	0.22
제주	35	6,658	0.19	35	7,150	0.20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 제외

(7) 호남지역 간이과세자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 평균보다 6%P, 서울보다 11.6%P 높아

- 2010년 호남지역 간이사업자 비율은 지역전체 사업자 대비 40.3%로 전국에서 간이사업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전국 평균인 34.3%, 서울지역 간이사업자 비율 28.7%에 비해 6%P, 11.6%P가 높아 이 지역의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서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로 분류

<각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현황>

(단위: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일반	간이	면세	총계	일반	간이	면세	총계	일반	간이	면세
본청	4,730,114	2,532,644 53.5	1,676,995 35.5	520,475 11.0	4,890,242	2,663,813 54.5	1,687,648 34.5	538,781 11.0	5,109,881	2,800,300 54.8	1,750,352 34.3	559,229 10.9
서울청	1,122,563	668,335 59.5	335,595 29.9	118,633 10.6	1,146,288	694,547 60.6	331,236 28.9	120,505 10.5	1,188,128	723,403 60.9	341,143 28.7	123,582 10.4
중부청	1,478,974	844,988 57.1	489,541 33.1	144,445 9.8	1,546,040	897,057 58.0	497,122 32.2	151,861 9.8	1,628,295	949,924 58.3	519,800 31.9	158,571 9.7
대전청	462,485	215,382 46.6	194,320 42.0	52,780 11.4	478,445	227,548 47.6	195,125 40.8	55,772 11.7	498,922	239,644 48.0	201,182 40.3	58,096 11.6
광주청	436,431	192,946 44.2	183,496 42.0	59,989 13.7	452,286	205,449 45.4	184,514 40.8	62,323 13.8	471,789	216,756 45.9	190,099 40.3	64,934 13.8
대구청	457,029	222,944 48.8	182,564 39.9	51,521 11.3	472,763	234,180 49.5	184,864 39.1	53,719 11.4	495,568	246,893 49.8	192,446 38.8	56,229 11.3
부산청	772,632	388,046 50.2	291,479 37.7	93,107 12.1	794,420	405,032 51.0	294,787 37.1	94,601 11.9	827,179	423,680 51.2	305,682 37.0	97,817 11.8

(8) 호남지역 EITC 지급을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 호남지역 2010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을 타지역에 비해 높아

- 2010년 광주청 EITC지급율은 4.2%로 타 지방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임.
- 전북 4.4%, 광주 4.2%, 전남 4.1% 순으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많다는 것을 나타냄
- 지급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5.9%
 - 근로장려세제(EITC)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됨.

<2010년 각 지방청별 EITC지급현황>

(단위:천가구)

구분		전체가구수	지급가구	비율
서울청	계	3,577	76	2.1%
중부청	계	5,398	176	3.3%
	인천	929	32	3.4%
	경기	3,908	122	3.1%
	강원	561	22	3.9%
대전청	계	1,860	65	3.5%
	대전	536	19	3.5%
	충북	565	21	3.7%
	충남	759	25	3.3%
광주청	계	1,868	79	4.2%

구분		전체가구수	지급가구	비율
	광주	519	22	4.2%
	전북	664	29	4.4%
	전남	685	28	4.1%
대구청	계	1,888	68	3.6%
	대구	874	32	3.7%
	경북	1,014	36	3.6%
부산청	계	2,983	102	3.4%
	부산	1,252	40	3.2%
	울산	378	10	2.6%
	경남	1,165	41	3.5%
	제주	188	11	5.9%
합계		17,574	566	3.2%

*전체 가구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을 참조. 천 단위 이하 가구는 반올림 하였음.

5. MB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 호남권 전국최고 수준

-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07년 29.3조원에서 '11.7월 40.1조원으로 36.8%나 증가하여, 전국 평균 31.2%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07대비 '11.7월 가계부채 증가율 : 호남권 36.8%, 수도권 33.2%, 충청권 32.2%, 영남권 25.0%, 기타 15.2%, 전국평균 31.2%
-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07년말 대비 '11.7월까지 호남권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11.1%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70%나 증가하여,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지역별로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07~'11.7월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 : 호남권 69.6%, 수도권 66.8%, 영남권 54.2%, 충청권 46.8%, 기타 33.0%, 전국평균 59.1%
- 주택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호남권 주택대출은 '07년 12.3조원에서 '11.7월 20.2조원으로 65%나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2~3배나 높은 수치임.
 - '07~'11.7월 주택대출 증가율 : 호남권 65.2%, 영남권 24.2%, 수도권 28.7%, 충청권 35.3%, 기타 12.9%, 전국평균 29.6%
- '11.7월 기준 호남권의 1인당 가계부채는 765만원으로 강원과 제

주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07년말 대비 '11.7월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또한 호남권이 전국 최고수준인 35.8%로 나타나 최근 악화된 가계사정을 보여주고 있음.
 - '11.7월 1인당 가계부채 : 기타 747만원, 호남권 765만원, 영남권 856만원, 충청권 935만원, 수도권 1,625만원, 전국평균 1,229만원
 - '07~'11.7월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 호남권 36.8%, 33.2%, 충청권 32.2%, 영남권 25.0%, 수도권 기타 15.2%, 전국평균 31.2%
- 1인당 가계부채 규모만 놓고 보면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호남권 가계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으로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은행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 전체 가계대출 중 90% 정도가 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 인상시 가계 및 금융기관 모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이 필요
- 가계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보다는 본인의 상환능력과 향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입을 실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외형확장 경쟁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점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호남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지자체가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가계부채 증가율>

(단위 : 조원, %)

지역	종류	2007/12	2011/07	'11-'07
전국	가계부채	474.1	622.2	31.2%
	(주택대출)	292.8	379.4	29.6%
	-예금은행	363.7	446.5	22.8%
	-비은행예금	110.4	175.7	59.1%
호남권	가계부채	29.3	40.1	36.8%
	(주택대출)	12.3	20.2	65.2%
	-예금은행	16.4	18.3	11.1%
	-비은행예금	12.9	21.8	69.6%
영남권	가계부채	90.4	112.9	25.0%
	(주택대출)	52.0	64.5	24.2%
	-예금은행	59.9	65.9	10.1%
	-비은행예금	30.5	47.0	54.2%
수도권	가계부채	304.3	405.2	33.2%
	(주택대출)	205.5	264.6	28.7%
	-예금은행	258.0	327.9	27.1%
	-비은행예금	46.3	77.3	66.8%
충청권	가계부채	36.5	48.2	32.2%
	(주택대출)	17.9	24.2	35.3%
	-예금은행	22.0	27.0	22.6%
	-비은행예금	14.5	21.3	46.8%
기타 (강원,제주)	가계부채	13.7	15.7	15.2%
	(주택대출)	5.2	5.8	12.9%
	-예금은행	7.4	7.4	0.3%
	-비은행예금	6.2	8.3	33.0%

출처 : 한국은행 통계자료 (지역별 가계부채 집계시 통계의 한계상 보험·연금 등 기타금융기관과 판매신용은 집계되지 않음)

<지역별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단위 : 만원/인, %)

지역	종류	2007/12	2011/07	'11-'07
전국	가계부채	962.3	1,228.7	27.7%
	(주택대출)	594.3	749.3	26.1%
	-예금은행	738.2	881.7	19.4%
	-비은행예금	224.1	346.9	54.8%
호남권	가계부채	563.1	764.5	35.8%
	(주택대출)	235.4	385.9	63.9%
	-예금은행	315.8	348.3	10.3%
	-비은행예금	247.3	416.2	68.3%
영남권	가계부채	691.9	856.0	23.7%
	(주택대출)	397.9	489.3	23.0%
	-예금은행	458.3	499.5	9.0%
	-비은행예금	233.5	356.5	52.7%
수도권	가계부채	1,269.8	1,624.8	28.0%
	(주택대출)	857.6	1,060.8	23.7%
	-예금은행	1,076.5	1,314.9	22.1%
	-비은행예금	193.3	309.9	60.3%
충청권	가계부채	733.1	935.4	27.6%
	(주택대출)	360.1	470.1	30.6%
	-예금은행	442.2	523.3	18.3%
	-비은행예금	290.9	412.2	41.7%
기타 (강원,제주)	가계부채	661.9	746.8	12.8%
	(주택대출)	250.5	276.9	10.6%
	-예금은행	359.6	353.1	-1.8%
	-비은행예금	302.3	393.6	30.2%

출처 : 한국은행 통계자료 (지역별 가계부채 집계시 통계의 한계상 보험·연금 등 기타금융기관과 판매신용은 집계되지 않음)

6. 어음부도율, 호남권 최고수준

□ 최근 10년 동안 호남권의 어음부도율은 연평균 0.1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연평균 0.08%의 두 배에 이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영남권, 충청권 등 다른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수도권만 전국평균 미만에 이르고 있음.

- '00~'10.8 연평균 어음부도율 : 호남권 0.16%, 영남권 0.15%, 충청권 0.09%, 기타 0.13%, 수도권 0.07%, 전국 0.08%

<최근 10년간 권역별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
연평균	0.08	0.16	0.15	0.07	0.09	0.13
2000	0.26	0.31	0.30	0.26	0.16	0.17
2001	0.23	0.23	0.22	0.23	0.19	0.20
2002	0.06	0.14	0.14	0.05	0.09	0.11
2003	0.08	0.17	0.20	0.07	0.10	0.13
2004	0.06	0.19	0.16	0.05	0.09	0.11
2005	0.04	0.13	0.11	0.03	0.06	0.12
2006	0.02	0.12	0.09	0.02	0.04	0.08
2007	0.02	0.14	0.11	0.02	0.08	0.08
2008	0.03	0.13	0.16	0.02	0.09	0.08
2009	0.03	0.10	0.10	0.03	0.05	0.06
2010.1~8	0.03	0.07	0.06	0.03	0.03	0.24

출처 : 한국은행 제출자료

* 기타 : 강원도, 제주도

□ 최근 3년 동안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에 있어서도 호남권은 전국 평균인 0.023%의 두배인 0.043%에 이르고 있어 호남권의 큰 기업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호남권, 영남권 등 다른 지방의 경우 전국 연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08~'10.8 연평균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 호남권 0.04%, 영남권 0.05%, 충청권 0.02%, 기타 0.08%, 수도권 0.02%, 전국 0.02%

<최근 3년간 권역별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
연평균	0.023	0.043	0.046	0.021	0.018	0.075
2008	0.020	0.039	0.076	0.017	0.020	0.011
2009	0.021	0.025	0.037	0.021	0.016	0.008
2010.1~8	0.027	0.064	0.024	0.026	0.019	0.207

출처 : 한국은행 제출자료

* 기타 : 강원도, 제주도

- 지난 10년 동안 어음부도율을 보면 지방, 특히 호남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자금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자족도를 높이고 지역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7. 기업 R&D 지원 호남 최하위, 수도권 집중

(1) R&D 관련 세액 지원 수도권 편중이 여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의 84.5%와 86.6%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08년 90.1%)
 - 세금혜택이 가장 적은 호남권의 경우 13개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0.4%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법인당 평균 지원 금액도 3,100만원으로 경기권 기업의 2억 6,300만원의 1/9 수준
 - 충청권이 전체 지원액의 2.3%, 경남권 4.3%, 경북권 6.2%로 비 수도권 지역은 사정이 대동소이함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492	1,232	2.50	100%	474	947	2.00	100%
서울청	183	518	2.83	42.0%	182	366	2.01	38.6%
중부청	175	524	2.99	42.5%	173	455	2.63	48.0%
대전청	38	25	0.66	2.0%	43	22	0.51	2.3%
광주청	20	7	0.35	0.6%	13	4	0.31	0.4%
대구청	27	81	3.00	6.6%	25	59	2.36	6.2%
부산청	49	77	1.57	6.3%	38	41	1.08	4.3%

- 조특법 10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9년 79.8%에 이어 '10년에도 수도권 소재 기업이 78.7%의 세액혜택을 받게 되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08년 79.6%)
 - 호남권 기업은 '10년 전체 세제감면액 1조 8,417억원 중 단 287억원의 세액혜택만을 가져가 전체 지원액의 1.6%에 그쳤음
 - 이는 충청권 기업 5.8%, 경북권 5.3%, 경남권 8.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호남지역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10,177	15,447	1.52	100%	11,764	18,417	1.57	100%
서울청	2,766	5,588	2.02	36.2%	3,320	5,765	1.74	31.3%
중부청	4,061	6,741	1.66	43.6%	4,692	8,737	1.86	47.4%
대전청	1,081	952	0.88	6.2%	1,225	1,065	0.87	5.8%
광주청	409	265	0.65	1.7%	483	287	0.59	1.6%
대구청	727	740	1.02	4.8%	787	981	1.25	5.3%
부산청	1,133	1,161	1.02	7.5%	1,257	1,582	1.26	8.6%

(2) 임시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수도권에 집중

-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조특법 26조)와 에너지 절약과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으로 신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25조2) 역시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
 -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10년 수도권이 전체 1조 7,027억원 중 1조 2,838억원, 총 75.4%을 차지했음
 - 반면 호남권 기업은 523억원으로 전체 대비 3.1% 지원을 받는데 그쳤으며 충청권 4.3%, 경북권이 6.0%를 차지했음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10년 수도권이 전체 2,573억원 중 1,904억원, 전체 대비 74%을 차지했음
 - 호남권 기업은 40억원에 그쳐 전체 세금혜택 대비 1.6%에 그쳤으며 경북권과 경남권이 각각 전체 대비 6.3%, 7.0%에 달함
 - 특히 업체당 평균지원액을 보면 호남권 기업은 9,800만원으로 서울권 업체 13억 7,600만원의 1/14에 그치고 있음
- 이 같은 결과는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투자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호남권 기업이 설비투자나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7,978	19,418	2.43		8,417	17,027	2.02	
서울청	665	7,216	10.85	37.2%	735	6,718	9.14	39.5%
중부청	3,145	6,673	2.12	34.4%	3,455	6,120	1.77	35.9%
대전청	786	916	1.17	4.7%	828	735	0.89	4.3%
광주청	616	381	0.62	2.0%	633	523	0.83	3.1%
대구청	1,013	2,625	2.59	13.5%	1,003	1,024	1.02	6.0%
부산청	1,753	1,607	0.92	8.3%	1,763	1,907	1.08	11.2%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1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으로 개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220	2,575	11.70		266	2,573	9.67	
서울청	83	1,859	22.40	72.2%	86	1,183	13.76	46.0%
중부청	44	288	6.55	11.2%	66	721	10.92	28.0%
대전청	16	178	11.13	6.9%	22	287	13.05	11.2%
광주청	27	47	1.74	1.8%	41	40	0.98	1.6%
대구청	20	68	3.40	2.6%	19	161	8.47	6.3%
부산청	30	135	4.50	5.2%	32	181	5.66	7.0%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비수도권에 우대를 주는 세금혜택은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상태임

-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6조 역시 비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추가 혜택에 따라 두 제도로 인한 세금혜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의 동등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수도권이 3,303억원으로 전체 42.8% 비수도권이 4,406억원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수도권이 491억원으로 51.2%, 비수도권이 468억원으로 48.8%를 차지했음
- 호남권은 여타의 산업지원 혜택에서 전체 금액대비 최소0.4%(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3.1%(임시투자세액공제)에 그쳤지만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는 전체 금액대비 각각 9.7%, 9.0%을 차지했음
 -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R&D세액공제나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혜택 비중이 높았음
 -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금혜택이 균형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116,658	8,460	0.07		124,450	7,709	0.06	
서울청	28,401	1,419	0.05	16.8%	29,957	1,317	0.04	17.1%
중부청	36,216	2,088	0.06	24.7%	37,856	1,986	0.05	25.8%
대전청	10,868	945	0.09	11.2%	11,849	906	0.08	11.8%
광주청	12,529	801	0.06	9.5%	13,930	745	0.05	9.7%
대구청	10,331	883	0.09	10.4%	11,428	812	0.07	10.5%
부산청	18,313	2,324	0.13	27.5%	19,430	1,943	0.10	25.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3,170	1,101	0.35		3,586	959	0.27	
서울청	397	253	0.64	23.0%	444	166	0.37	17.3%
중부청	959	328	0.34	29.8%	1,045	325	0.31	33.9%
대전청	423	102	0.24	9.3%	512	89	0.17	9.3%
광주청	281	56	0.20	5.1%	383	86	0.22	9.0%
대구청	382	114	0.30	10.4%	389	72	0.19	7.5%
부산청	728	248	0.34	22.5%	813	221	0.27	23.0%

8. 조달청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지역편중 지원

-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강요를 막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지역균형과는 무관하게 ‘초불균형’인 상태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 36조 8,594억원 중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8,462억원으로, 전체의 단 2.3%에 불과
- 광역자치단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경남 등 일부지역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해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줄어들어 작년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대비, 2010년에 구매금액과 비중이 감소한 지자체는 광주와 제주 단 두 곳 뿐임.

<물품구매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16개 시도별 구매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3년 총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원)	비율	
1	서울	28,912	27.6	35,752	26.8	35,552	27.2	10조216억	27.2
2	경기	21,704	20.7	29,020	21.7	27,546	21.1	7조8,270억	21.2
3	경남	5,533	5.3	7,728	5.8	8,286	6.4	2조1,547억	5.8
4	부산	4,652	4.4	6,754	5.1	7,669	5.9	1조9,075억	5.2
5	경북	4,325	4.1	6,509	4.9	5,843	4.5	1조6,677억	4.5
6	전북	4,688	4.5	5,855	4.4	5,672	4.3	1조6,215억	4.4
7	충북	4,456	4.3	5,909	4.4	5,272	4.0	1조5,637억	4.2

구분	2008		2009		2010		3년 총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원)	비율	
8	충남	4,123	3.9	5,712	4.3	5,492	4.2	1조5,327억	4.2
9	대전	4,126	3.9	5,116	3.8	5,699	4.4	1조4,941억	4.1
10	인천	3,772	3.6	4,663	3.5	4,963	3.8	1조3,398억	3.6
11	대구	3,914	3.7	4,594	3.4	4,546	3.5	1조3,054억	3.5
12	전남	3,317	3.2	4,820	3.6	4,715	3.6	1조2,852억	3.5
13	강원	3,656	3.5	4,128	3.1	4,485	3.4	1조2,269억	3.3
14	광주	2,863	2.7	3,095	2.3	2,504	1.9	8,462억	2.3
15	제주	3,736	3.6	2,685	2.0	1,324	1.0	7,745억	2.1
16	울산	826	0.8	1,173	0.9	910	0.7	2,909억	0.8
계		104,603	100	133,513	100	130,478	100	36조8,594억	100

(자료 : 조달청)

* 구매비율 :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 대비 각 지역별 구매금액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조원, 경기 9조원으로 수도권 중소기업의 구매 비중은 호남지역의 5배에 달하며, 영남 지역의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 비해 2배 수준이며 충청권도 호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물품구매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권역별 구매 현황>

(단위 : %)

구분	서울	경기	영남	충청	호남
2008	2조 8,912억	2조 5,476억	1조 9,250억	1조 2,705억	1조 868억
2009	3조 5,752억	3조 3,683억	2조 6,758억	1조 6,737억	1조 3,770억
2010	3조 5,552억	3조 2,509억	2조 7,254억	1조 6,463억	1조 2,891억
계	10조 216억	9조 1,668억	7조 3,262억	4조 5,905억	3조 7,529억
비중(%)	27	24	19	12	10

(자료 : 조달청) * 강원 및 제주 제외

* 비중 : 최근 3년간 해당지역 실적 / 16개 시도별 합산 실적

- 조달청은 “지역소재 기업체 비중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전남의 경우, 업체 수는 상위권인 전국 5위 인데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은 12위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나서, 지역소재 기업체 비중을 고려해도 지원이 편중되어 있음.

<조달업체 등록 중소기업 16개 시도별 현황>

구분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수 순위	구매실적 순위
서울	48,721	1	1
경기	43,108	2	2
경남	13,163	3	3
경북	12,042	4	5
전남	10,701	5	12
부산	10,155	6	4
전북	9,381	7	6
충남	9,179	8	8
강원	8,823	9	13
인천	8,314	10	10
대구	7,933	11	11
충북	7,730	12	7
대전	7,084	13	9
광주	5,653	14	14
울산	3,394	15	16
제주	3,331	16	15
계	208,920		

(자료 : 조달청)

9.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지역별 편차 극심

□ 수출입은행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수출 중소중견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 육성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중이나 지역별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1) 수도권(48%)과 비수도권(52%)간, 비수도권내 지역간 지원(영남 38%, 호남 4.2%) 격차 극심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조 2,997억원, 영남권 1조 388억원으로 수도권 지원금액은 호남지역의 11배에 달하며 영남지역의 경우도 호남에 비해 9배 수준이며 충청권도 호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금까지 히든챔피언 업체에 선정된 155개 업체 중 광주 지역 선정업체는 4개 업체로 전체 2.5%에 불과하며 총 지원금액 2조 7,325억원 중 광주지역 업체 지원금액은 228억원으로 전체의 단 0.8%에 불과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지역별 업체수 및 지원금액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합계
업체수	84	43	18	9	1	155
지원금액	12,997	10,388	2,776	1,164	-	27,325
비 중	47.5%	38.0%	10.1%	4.2%	-	100%

*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원 실적(자료 : 수출입은행)

- 권역별 히든챔피언 신청업체 대비 선정업체 비중 역시 영남권의 경우 53%에 달하나 호남권의 경우 40%에도 못 미침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지역별 신청업체 및 선정업체 현황>

(기준 : 2011. 5월, 단위 : 개)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합계
신청업체	160	78	38	23	3	302
선정업체	77	42	18	9	1	147
비 중	48%	53%	47%	39%	33%	

* 2011년 5월 이후 월드클래스 300 선정업체 제외(자료 : 수출입은행)

(2)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와 선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는히든 챔피언 제도의 취지와 지역별 히든 챔피언 신청업체의 적합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영남 초집중 현상은 문제가 있음.
- 지역별 신청업체 대비 선정업체 비율만 보더라도 수도권 영남의 경우 50%에 육박하지만, 호남의 경우 40%에도 미치지 못해 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평가항목도 포함시켜야 함.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한국형 히든챔피언 적합도	기술력(35%)	기술개발투자, 기술개발능력,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35%)	시장성장성, 기업성장성, 중장기사업계획
	CEO역량(10%)	경영역량, 기술역량 등
재무안정성	재무건전성(20%)	한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등급

(자료 : 수출입은행)

- 또한, 당장의 매출액과 실적보다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 줄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육성을 한다지만, 객관적인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화 및 도덕적 헤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10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한 기업은 전체 147개 업체 중 61업체에 달함
-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상 감소한 업체는 10개 업체이며 이 중 이익 감소가 가장 큰 업체는 무려 488억원의 손실
- 한국거래소에서도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히든 챔피언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선정된 업체가 상장 폐지되거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제도자체에 대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음(한국거래소 히든 챔피언 선정업체 29개 중 상장폐지된 업체가 2곳,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업체가 40%에 달함)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중 영업이익 감소 상위 5개 업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선정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감소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	2010. 3.15	396	-209	244	-244	-488
2	2010. 6.21	771	289	583	130	-453
3	2010. 3.15	385	-52	247	-80	-327
4	2011. 5.17	440	79	354	28	-326
5	2011. 5.17	891	371	568	276	-292

(자료 : 수출입은행)

- 사업참여도가 낮거나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화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자격박탈 기준 및 업종별 각 성과 평가 지표 마련 필요

- 전통적인 평가기준으로서 수익성과 성장성,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경우 업종 특성이 무시되므로 업종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유사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식의 지표 개발도 필요
- 기업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후 관리방안 마련 시급